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6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4. .
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
용도 조항에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고 시설별로 세분
화되어 있던 기금의 사용용도를 범주별 항목으로 재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

- 1)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
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
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,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에는 사
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한편,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
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
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1.02.25. ~ 2021.03.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의무예치액”을 “의무예치금액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
용도

가. 재난 예방·대응·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·연구 사업

나. 재난 예방·대응을 위한 교육·훈련 및 홍보

다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·자문에
따른 장비구입·수당 및 경비

라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
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·보강

마.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
바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(장비구입 포함)

사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

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
용자

아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
위한 상담활동 지원

자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
2.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

가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의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상 하천재
해 위험지구, 내수재해 위험지구, 토사재해 위험지구, 사면재해
위험지구, 바람재해 위험지구, 기타재해 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
나. 「산림보호법」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
지역에 위치한 시설

다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
치한 시설

라.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
마.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
는 시설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제1항 중 “영 제74조제1호마목”을 “제6조제1호사목”으로, “세대당
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”을 “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세대당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”을 “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”으로, “총 소요금액의”를 “세대당 총 소요금액의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건설교통국장”을 “기금업무 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 중 “조례에”를 “조례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 (의무예치금액의 예치·관리) <u>의무예치액</u> 은 서울특별시성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지정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	제4조 (의무예치금액의 예치·관리) <u>의무예치금액</u> ----- ----- ----- --.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) 및 보수·보강 3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.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 6.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	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. 재난 예방·대응·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·연구 사업 나. 재난 예방·대응을 위한 교육·훈련 및 홍보 다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점검·자문에 따른 장비구입·수당 및 경비 라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·보강

및 응급복구

7.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 조치의 이행(행정대집행)

8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

9.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

10. 폭염, 한파, 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

11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마.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
바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(장비구입 포함)

사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
아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

자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
2.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

가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의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상 하천재해 위험지구, 내수재해 위험지구, 토사재

제7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
및 임차비용 용자 등) ① 영 제7
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
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
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
다.

해 위험지구, 사면재해 위
험지구, 바람재해 위험지
구, 기타재해 위험지구 등
에 위치한 시설
나. 「산림보호법」에 의한
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
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
한 시설
다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
관한 법률」에 의한 붕괴
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
라.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
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
에 위치한 시설
마.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
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
다고 인정되는 시설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
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7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
및 임차비용 용자 등) ① 제6조
제1호사목-----
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세대당

--.

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

③ (생략)

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

· ② (생략)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<단서 신설>

1. ~ 3. (생략)

④ · ⑤ (생략)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-----

-----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 기금업무 담당국장-----

----- 단
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시행규칙) -- 조례의 ---

---.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기금의 용도(안 제6조)의 확대에 따라 재해발생 시 재정적 지원이 발생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 제2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은 상위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확대하고 있음. 그러나 자연재해는 불가측성으로 연도별 재해 피해 규모가 일정한 추세 없이 높은 불규칙성을 보임.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장래의 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를 예측하고, 개정안에 소요될 재정재원액을 미리 추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본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

4. 작성자

- 치수과 시설8급 조대연 (02-2286-5793)

< 관 계 법 규 >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가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

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

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
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·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
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
□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5조제2항 (용도)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(이하 “기본법 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
 - 가. 재난 예방·대응·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·연구 사업
 - 나. 재난 예방·대응을 위한 교육·훈련 및 홍보
 - 다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·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·수당 및 경비
 - 라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·보강
 - 마.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 - 바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(장비구입 포함)
 - 사.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 - 아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
 - 자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
2.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
 - 가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 위험지구, 내수재해위험지구, 토사재해위험지구, 사면재해위험지구, 바람재해위험지구,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
 - 나. 「산림보호법」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
 - 다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
 - 라.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
 - 마.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
3.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